

원주푸드협동조합 어떻게 만들 것인가?¹⁾

－ 원주푸드시스템의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

박수영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총무

〈목 차〉

- I. 문제제기
- II. 원주푸드 운동의 현황과 진단
 - 1. 환경농업직거래단체
 - 2. 원주 단위농협
 - 3.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 4. 관주도의 원주푸드 운동
 - 5. 각 부분의 역할정리
- III. 원주푸드 운동의 과제
 - 1. 생산영역 과제
 - 2. 유통영역 과제
 - 3. 소비영역 과제
 - 4. 원주푸드협동조합을 위한 과제
- IV. 맺으며

I. 문제제기

○ 원주지역은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환경농업을 시작하였고 가톨릭농민회, 원주생협, 한살림 등 생산, 유통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농업을 조직화하여 왔다.

○ 원주지역에서 그동안 진행된 지역농업 조직화는 분명 한국농업사에 일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의미가 분명한 활동이었으며 훌륭한 지역농업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로컬푸드 관점에 서면 약간 다르게 해석된다. 농산물의 유통부문과 소비부문을 중심으로 가톨릭농민회, 원주생협, 한살림 등이 각각의 단체의 요구와 이해에서 수도권의 물류센터와 연계해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주지역 전체를 놓고 원주지역 농업 농촌 정책의 흐름과 판을 만들어 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 원주푸드협동조합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원고는 원주로컬푸드 TFT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 그러나 모든 내용이 그렇지는 않고 편집자 개인의 주관에 있어 있는 부분도 있음. TFT의 논의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따라서 이 원고는 완성된 원고가 아니라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는 중간 보고 정도의 의미임.
또한 여기서 말하는 ‘원주푸드협동조합’은 확정된 명칭이 아닌 가상의 이름이며 원주지역의 공공급식과 지역 물류유통을 대표할 조직체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 2000년대 중반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에서 로컬푸드 운동의 제기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이 새로운 공공영역 시장으로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꾸러미운동, 농민장터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 이런 현상들을 원주에서는 원주푸드 운동으로 집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 운동이 가지는 새로운 질서 또는 지역 내 새로운 생산력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하여 원주지역 농민들 사이의 관계, 환경농업 단체 사이의 관계 등 생산, 유통 관계를 개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하지만 최근 3~4년간 원주푸드와 관련된 농업정책의 속도가 빠르게 변화되는 것에 비하여 지역의 환경농업단체 및 협동조합 단체 등 민간영역에서의 대응은 약간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다.

○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지자체와의 관계에서 원주푸드 운동의 전체적인 방향, 혹은 운동을 풀어 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아 민관 파트너십에서 부조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민간영역 내부의 관계에서 유통단체(원주가능, 원주생명농업, 현계산, 한살림 등 유통조직)들이 쌀 중심의 부분적 연대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생산-유통-소비부문에서 개혁 지점과 유통부문에 대한 통합 결의를 내오고 있지 못하고 총론적인 차원에서 문제의식만 공유 있는데서 오는 답답함이라 할 수 있겠다.

○ 이런 두 가지 양상이 집중되는 곳이 ‘농업회사법인 맞두레’ 이고 이에 맞두레의 고민을 요약,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다.

- 로컬푸드 운동이 제기되었음에도 원주생협, 한살림 등 소비단체에서 지역산 농산물을 연계하고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지 않거나 비약적이지 않음.

-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시장이 형성되고 논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의 공동대응 수준이 미약함. 사업을 풀어나가는 수순을 지자체가 제시하지 못하고 민간과 협의가 잘 안됨.

- 친환경농산물 생산부문에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활동이 작아지고 조직화 작업이 잘 진척되지 못함으로 지역 내 농산물의 생산, 유통 조직화에 적신호가 켜짐.

- 농업회사법인 맞두레의 사업 구조가 혼재되어 있음. 식생활 교육, 급식, 물류유통 등 여러 분야가 종합된 구조임. 적절한 구조개편을 통한 역할분담과 사업 집중화의 필요가 발생.

-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방식과 주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원주시나 원주푸드위원회의 경우 하드웨어 중심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고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구조와 운영, 사업진행 내용 등에 대한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음.

- 이에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표성, 전문성, 안정성을 겸비한 책임 있는 운영주체 형성이 필요하며, 원주푸드 관련 의제를 제안하고 주도할 규모 있는 법인체가 요구됨.

-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으로 지역의 환경농업단체 및 농관련 단체들이 가칭 '원주푸드협동조합'으로 연합하여 규모화 된 조직을 고려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조성됨.

○ 이에 맞두레 이사회에서는 원주푸드 운동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하여 맞두레 참가단체 실무자들로 구성된 원주로컬푸드 TFT를 2012년 2월 제안, 구성하였다.

또한 TFT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주푸드 운동의 공동목표와 실천과제 및 원주푸드협동조합의 발전방향을 지역사회에 제안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하였다.

○ 원주로컬푸드 TFT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환경농업단체 간 연계를 통한 지역 내 계획생산 및 소비를 위해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영역의 조직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둘째, 학교급식 이외에 다른 유통, 소비영역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조직화 가능한가?

셋째,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연계한 책임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주푸드협동조합의 목표와 방향 및 조직화 과제는 무엇인가?

넷째, 이를 위해 지역 내 환경농업단체 및 협동단체에서 진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 원주로컬푸드 TFT 현재 수준의 논의 정도가 첫째 문제의 생산영역과 유통부문 일부 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해 연구문제에 대한 서술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유통과 소비의 영역 그리고 원주푸드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상과 내용, 단체의 역할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과제와 방향을 제안하는 수준으로 정리했음을 밝혀둔다.

II. 원주푸드 운동의 현황과 진단

1. 환경농업직거래 단체

○ 원주에 있는 환경농업직거래 단체²⁾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성격	단체명	비고
생산 조직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농민운동 조직에 가까움
	한살림 원주공동체	한살림 사업연합과 직거래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	생산 조직
유통 조직	원주가농영농조합	우리농유한회사와 연계
	원주생명농업	두레생협연합회와 연계
	현계산영농조합	맞두레와 연계
	남한강영농조합	자체 소비처와 연계
	농업회사법인 맞두레	쌀 중심 학교급식
	횡성가공생산자연합회	자체 소비처와 연계
소비 조직	한살림 생협	한살림사업연합과 연계
	원주생협	두레생협연합회와 연계

○ 위 단체들의 특징을 보면 첫째, 생산조직의 경우 생산부문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고 생산부문을 조직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한 경험이 미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 가톨릭농민회의 성격은 운동조직에 가까워서 마을 분회를 중심으로 가톨릭농민회의 고유목적에 맞는 운동을 진행하는 경우이고 한살림원주공동체의 경우는 한살림사업연합의 요구에 맞게 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며 생산조직화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요구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 따라서 원주에 환경농업과 관련된 생산조직은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라고 볼 수 있는데 원천연의 정관이 나 지금까지 사업내용 등에서 보면 생산조직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유통과 지역 농정에 대응하는 논의가 많았다.

- 단체 중심으로 수도권 전국단위물류센터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매관리가 진행된 것이지 원주지역 전체를 놓고 진행한 환경농업 생산조직화의 경험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 유통조직의 경우 맞두레를 제외하고는 각각 전국단위물류조직과 연계된 특성³⁾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볼 때 원주 가능과 원주생명농업이 유통조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조직은 각각 우리농유한회사와 두레생협연합회에

2) 환경농업 및 직거래 단체의 개념은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단체로 한정하는 개념임. 편집자 주.

3) 남한강영농조합과 현계산영농조합은 본래 남한강삼도생협으로 한 몸이 있으나 내부의 사정으로 분리된 조직이며 현계산영농조합이 쌀 수매를 통해 맞두레 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이다.

연계되어 있고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 소분, 포장하며 각각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렇게 원주기능과 원주생명농업에서 매취한 농산물의 대부분이 수도권의 전국단위 물류센터로 공급되며 원주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 또한 원주푸드의 수익구조가 불명확한 상태 혹은 중장기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원주에 공급하는 농산물의 양을 늘리거나 구성비를 조정할 정도로 경영의 위험을 감수하고 농산물의 양을 늘려야 할 필요가 절실하지도 않다.

○ 따라서 기존 수도권 전국단위 물류센터와의 직거래 유통영역을 고수하면서 자본력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원주푸드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참여폭을 넓혀 가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후 조직될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경제사업위원회 역할이기도 하다.

○ 원주푸드 운동과 관련된 논의를 총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구체적 상황적 차원에서 집약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원주푸드 관련 활동가 및 담당자들의 책임이 크다.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논의를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의 경우 이제라도 자기가 속해있는 조직에서 원주푸드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원주 단위농협

○ 학교급식 친환경 쌀의 경우 초등학교는 맞두레에서 공급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문막농협, 원주농협, 남원주농협 등이 지역을 나누어서 공급하고 있다.

○ 원주지역 각 단위농협에서 원주푸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논의가 진척되었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정보가 없다.

○ 다만 문헌자료⁴⁾를 통해서 나타난 농협의 고민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비전이 미흡.
- 학교급식 협의 구조가 미흡.
- 계통농협의 학교급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하인 경우가 약 67.3%로 영세성.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계약재배 미흡.
- 계통농협의 시설확보가 미흡.
- 경쟁입작방식으로 인한 학교급식 안정성 하락, 계약재배의 어려움 발생.

4) 농협 학교급식사업 비전 수립 및 체계화 전략, 2010, 지역농업네트워크, p137~140 내용 요약 발췌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학교에서의 검수검품 기준 미정립.
- 학교 계약주기, 수발주시스템 미흡으로 업무 부담 발생.
- 학교급식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인 농가조직육성관점의 원물조달, 안정적인 급식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 관련 주체를 포괄하는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구상 등 급식사업을 구성하는 핵심 부분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다. 따라서 지역단위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에 치우치는 경향이 우세함.
- 계통조직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로 파악되므로 총괄거점 기구 육성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처하는 것이 유리함.
- 농협학교급식의 공익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운영이 중요
- 지역본부단위의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시군, 읍면단위 계통조직의 학교급식 사업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위의 자료의 내용을 미루어 보아 단위농협들의 상황은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타남.

첫째, 지역농산물 원물조달에 있어서 농가 조직화 부분이 미약함.

둘째, 안정적인 학교급식 시스템(유통에서 있어서 필요한 전처리 및 신선편이시설, 검수체계, 수발주 체계, 비교적 높은 품위기준,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의기구와의 협력 등)이 매우 복잡하여 쉽게 접근하지 못함.

셋째, 학교급식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단위농협이 참가하는데 매력이 약함.

넷째, 이런 이유로 단위농협 차원이 아닌 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같은 전문사업단을 조직하여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음.

○ 단위농협의 상황이 TFT의 문제의식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되며 농협조직과 공식 혹은 비공식 논의테이블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⁵⁾

○ 원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이하 원친연)는 2009년 지역의 원주가농, 원주생명농업, 한살림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친환경농업 생산자를 조직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주푸드에 공급되는 환경농산물의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성되었다.

○ 한쪽에서는 원친연이 자체적인 유통조직으로 발전하여 원주푸드 유통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도 있었으나 원친연의 조직 침체와 더불어 이런 구상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다.

5) 이후 서술되는 원친연에 대한 진단은 원주로컬푸드 TFT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편집자 개인의 생각임.

○ 원천연은 최초 300여명 가량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면지회를 구성 등 활기찬 출발을 보였으나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였고, 특히 농산물 판로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를 실현시켜 주지 못하였다. 원천연 회원 중 환경농업직거래단체(가능, 생명농업, 한살림) 등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은 나름의 판로가 안정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 원천연의 경우 출발에서 생산조직으로서의 고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유통조직, 정책개발을 위한 – 실제로 원주푸드와 관련된 정책을 소통하고 논의하는 합의 기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느낌이 강하다.⁶⁾

○ 아래에서 회원들의 요구와 위에서 움직이지는 운영진의 활동이 달랐다는데서 회원 축소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관에 사무국을 명시하지 않고 실무책임자 없이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간사 역할을 진행하는 것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조직을 움직여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났을까? 이는 원주푸드 운동을 조직 진행하는 공식적인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원주푸드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있지만 그 역할이 미비하여 원주푸드 운동 전체를 담아낼 수 없고 상시적으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므로 상시적이고 실무적인 단위에서의 집단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여기에 원천연을 확대 발전시켜 유통사업 단체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맞물려 지면서 비교적 논의하기 편한 구조로 농민도 조직하고 원주푸드와 관련된 논의도 진행하는 모양으로 조직을 운영해 왔던 것이다.

○ 앞으로는 원천연이 생산조직으로서 자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활동 궤도를 수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생산조직에 맞는 정책개발과 연구활동 그리고 면단위 조직화가 아닌 품목단위 조직화를 위해 내부 구조개편이 수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환경농업직거래조직과의 관계에서 원천연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어떤 액션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원주에서 소비되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은 반드시 원천연을 통한다.” 는 정도의 원칙이 지역의 친환경 생산자들에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원천연이 살 수 있다.

4. 관주도의 원주푸드 운동

○ 원주푸드 운동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며 신선한 농식품을 공급하며 지역의 식량자립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정책이자 거버넌스(Governance) 운동임

그 핵심적인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CSA(공동체지원농업), 도시농업, 농민시장 등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영역과 친환경농업지원, 유통체계 지원, 공공기관 급식지원 등의 공공기관 영역이 서로 어우러져 있다.⁷⁾

○ 그동안 원주푸드 운동의 성과를 짚어보면 관주도로 활동이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6) 원천연의 정관 제 4조(사업)을 보면 생산조직이라는 보다는 정책개발, 유통 등을 염두한 모습이 많다.

1. 지역농업계획과 지역식량계획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사업,
2. 지속가능한 지역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개발
3. 친환경 농산물의 공동 판매망 구축
4. 친환경 농업기술의 보급 및 정보교류
5. 본회 본직에 부합하는 사업

7) 원주푸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보고서, 2010, 협동사회경제연구원. p138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원주푸드위원회 구성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주푸드계 신설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이 추진
친환경하우스 지원사업

원주시 조직개편으로 친환경, 원주푸드, 원예특작, 유통지원 부서를 통합하는 농업유통과의 신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원주에서의 로컬푸드 운동은 일찍이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였고 거버넌스 형식을 도입하여 관의 참가를 요구하였지만, 민간영역과 호흡이 잘 맞는 편이 아니었다.

○ 관과 민이 생각하는 각각의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다르겠지만 현재 원주푸드 운동은 원주푸드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원주푸드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제출을 관에서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관주도가 되는 경향이 있다.

○ 관주도의 로컬푸드 운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더 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은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원주푸드 위원회에 민간간사가 있어 민간영역과 논의구조를 맞춰갈 필요가 있고, 민간영역을 대표할 규모있는 법 인체가 만들어져서 원주푸드 운동 관련 의제를 생산하고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주푸드협동조합이 기대된다.

○ 또한, 원주푸드 운동의 정책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다품종소량생산체계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지역 내 상업농 혹은 대농의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된 영세농, 가족농, 고령농, 겸업농들이 원주푸드 운동의 조직화 대상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1ha 미만의 경작지를 소유하는 있는 농가를 적극적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 규모화 된 상업농, 단작 중심의 대농의 경우는 농협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조직, 공동출하 조직으로 묶어 규격화, 브랜드화 하는 농업정책을 통해 생산조직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로컬푸드 영역에서는 상업농이나 대농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들의 생산방식은 로컬푸드에서 요구하는 생산방식과 달라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화하면 생산 및 유통에서 역효과가 일어나기 쉽다.

○ 따라서 원주푸드 운동의 내용은 가족농, 고령농,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정 프로그램을 추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천연을 중심으로 친환경농가의 계획생산 체계를 구축
농민가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농촌마을개발사업에 거점 농민가공센터를 설치 운영

로컬푸드 소비 시장을 위해 꾸러미 사업, 농민장터(새벽시장과 결합) 등을 진행
경종과 축산을 혼합하여 순환시스템을 도입하는 농가에게 장려금 지원
자작 경작지 1ha 미만의 농가에게 원주푸드 우선 공급권 부여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자금지원
농촌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복지 시스템 및 집단농장 등 일거리 마련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화하여야 한다.

5. 각 부분의 역할 정리

○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의 경우

- 전국단위 물류센터와의 직거래 물량을 중심으로 지역의 농가를 조직화하였음.
- 농가 조직화의 경우 생산관리라기 보다는 필요한 농산물을 조달하기 위한 구매관리에 더 치중하였음. 따라서 생산관리에 필요한 노력(생산조직화)을 각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기울이며 원주푸드 운동에 참여해야 함.
- 농산물 구매에 있어서는 전국단위 물류센터 공급량과 지역 공급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한계선을 정리하고, 지역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리는데 함께 참여함.
- 원주푸드 운동에 맞는 단체의 요구를 정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농협의 경우

- 지역 단위농협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 타 지역 농협에 대한 문헌자료 검토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 현재 원주푸드 TFT의 고민과 유사함.
- 어떤 경로로든 농협과 결합이 필요하며, 학교급식 이외에 좀 더 다양한 유통을 영역을 놓고 중장기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원천연의 경우

- 원천연은 유통조직도 아니고 농정활동을 중심에 놓은 조직도 아니다.
- 원천연은 생산조직이며 생산조직에 걸 맞는 사업을 통해 생산조직화에 기여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원천연을 품목단위로 구조 개편해야 하며,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 관 중심의 원주푸드 운동의 경우

- 원주푸드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대하여 민간의 영역과 호흡이 잘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내용 없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원주푸드위원회 논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다음의 문제이다.

- 민간차원에서 간사를 마련하여 관과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 구조가 필요하며, 민간차원에서는 원주푸드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화 된 법인체가 필요하다.

- 이를 통해 다품목소량체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족농, 영세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생산력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ㄴ

Ⅲ. 원주푸드 운동의 과제

1. 생산영역의 과제

1) 현황

○ 원주가농, 생명농업, 현계산 등의 조직은 생산과 유통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생산관리 측면보다는 유통의 측면을 더 많이 강조한 조직임. 따라서 생산조직이라기 보다는 유통조직으로서의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이는 생산관리와 구매관리가 혼재된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는 않고 용어를 사용하거나 생산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은 모습에서 있음.

○ 또한 여러 개의 조직이 하나의 생산자를 대상으로 구매관리를 진행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함.

○ 이를 위해 생산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자 통합관리 방식을 만들고 구매단계에서 일정한 조정이 필요함. 농산물 공급량 조정, 가격조정 및 품질 조정을 위한 합의기구가 필요.

2) 생산 조직화 측면의 강화

○ 농업에 있어서 생산조직화란 개별경영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의 한계를 공동경영을 통해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생산에 필요한 본원적 생산요소인 자본, 토지, 노동 등의 효율적 관리와 비료, 농약 등 중간에 투입되는 농자재의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경영의 합리화와 농업생산력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 생산관리 영역

- 토양 : 토양검증에 따른 맞춤형 시비 진행(원주시와 협의), 녹비작물 재배(단지와 공동재배)

- 노동 : 공동 퇴비 살포, 공동 방제 활동 등

※ 공동노동으로 출력화 된 인원과 장비 등에 대한 인건비와 사용료 지급

계절적 수요에 따라 재배를 달리하는 농작물에 대해 공동노동 진행

- 품종 : 채종포의 공동운영. 품종의 통일과 종자의 일괄보급
- 농자재 : 육묘, 우렁이 공동구매
비료, 농약, 기타 농자재의 공동구매
특히 미생물제제, 퇴비, 유기질 비료 등의 공동구매
- 기술지도 : 품목별 선도농가와 후발농가간의 멘토링을 통한 개별적 기술지도
정기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기술지도
- 생산물과 부산물의 연계 : 농가 내, 농가 간, 지역 내, 지역 간 생산물과 부산물의 연계

○ 위와 같은 생산관리 영역 특히 환경농업에서 생산부문의 조직화를 위해 생산관리를 전담하는 집단 또는 운영방식이 필요함.

○ 원천연의 존재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원천연은 생산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으로 원주 지역농업에서 있어서 생산부문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함.

3) 환경농업직거래단체와 원천연의 역할 관계 구분

○ 환경농업직거래단체의 경우 생산, 구매, 유통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생산관리는 생산자 개인에게 맡기는 경향이 많고 구매관리와 유통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생산관리 - 원천연

구매관리 - 원천연 + 환경농업직거래 단체

유통관리 - 환경농업직거래 단체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구분함.

○ 생산관리의 경우 위에서 제기한 영역에 대하여 원천연에서 사업을 진행

그러나 현재 실무 능력의 한계로 전수조사 등 통합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작업은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와 함께 진행해야 함.

○ 구매관리의 경우 원천연, 원주기능, 원주생명농업, 한살림, 맞두레 등에서 생산관리 실무자 연석회의의 진행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경제사업위원회에서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4) 원천연의 기능과 역할 재고

○ 원천연은 사단법인으로 법인화 하고 지역농업 조직화에서 생산부문 조직화를 담당

○ 현재 실무능력 한계로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와의 도움을 받아 생산관리 실무자 연석회의 등을 통해 지역 친환경생 산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이를 바탕으로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 생산자를 통합관리 함.

○ 생산관리 실무자 연석회의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사업위원회를 구성(각 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 생산 및 구매 관리에 대한 논의 진행.

또한, 회원과의 소통, 역할관계를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를 발행하고 경제사업위원회에서 편집회의를 진행하여 소식지를 발행함. 경제사업위원회는 향후 원주푸드협동조합이 마련되면 이쪽으로 이관하여 활동함.

○ 원천연의 하부 조직은 현재 면지회 중심에서 점차 품목단위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현재 이사회 구성원들이 가능하면 품목별 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도록 하고(조직의 혼란 제거) 1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총회에서 조직 변경을 진행함.

 품목지회는 양곡 지회, 과수 지회, 축산 지회, 채소 1 지회, 채소 2 지회 등 5개 지회로 함.

 채소 1 지회는 저장이 어려운 업체류, 과채류 등의 품목군으로 조직화하고

 채소 2 지회는 비교적 저장이 용이한 구근류, 조미채소류 등의 품목군으로 조직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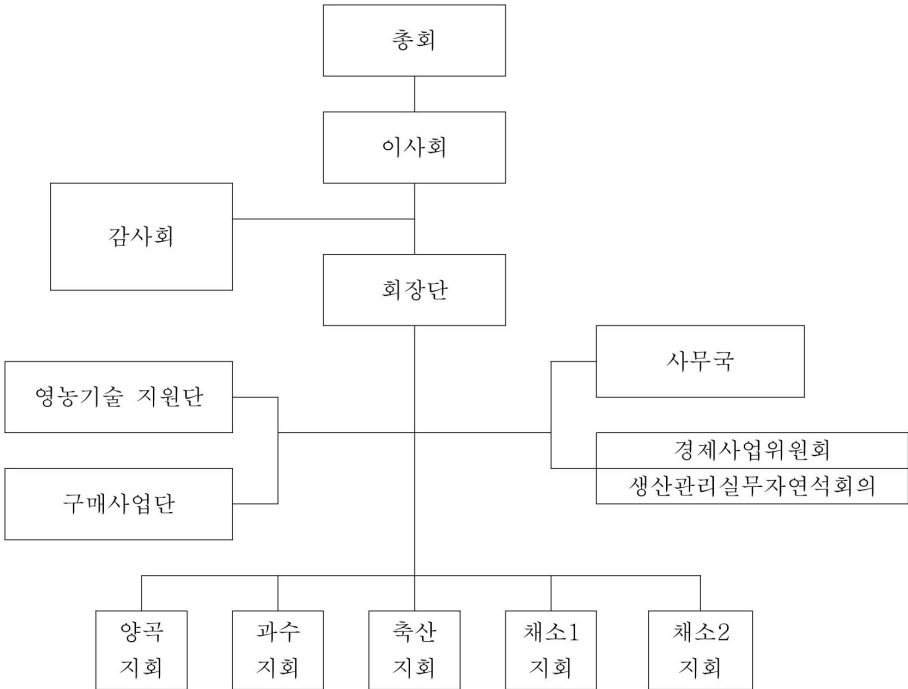
○ 이사회는 기존 합의한 내용대로 현재 구성된 이사와 환경농업직거래 단체 대표자(원주가농가능, 원주생명농업, 한살림, 현재산) 4명이 함께 논의하는 테이블로 구성함.

또한, 회장단(회장인, 부회장2인, 총무1인)에서는 지자체와의 교섭력을 높이는데 역할을 진행함.

○ 영농기술지원단을 신설하여 품목별 선도농가가 후발농가에 대해 개별적인 멘토링을 진행

이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를 공식적인 활동으로 수준으로 높이고 예산지원을 끌어냄.

○ 구매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매사업단(특별위원회 수준)을 조직하여 농민장터, 농자재 공동구매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직 진행함.



2. 유통영역의 과제

1) 생산과 구매관리에 대한 역할분담

○ 역할분담

단계	역할	담당
생산 관리	개별단위 경영의 어려움을 공동노동을 통해 해소 농가 간, 지역 간, 단체 간 공동노동 공동구매 진행	원천연
구매 관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자 관리 통합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농산물 공급 조정 생산관리실무자연석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	경제사업 위원회
매수 집하	구매관리 과정에서 조정된 농산물을 각 유통조직에서 매수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가농, 원주생명농업 등 유통조직	유통조직
전처리 소분 포장	원물의 상품화	유통조직
배송	상품의 배송	유통조직
소비	소비자 혹은 소비자단체	소비조직

○ 생산관리 혹은 생산조직화는 그동안 원주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원천연에서 전담하여 진행하고, 원천연의 위상을 생산조직으로 명확히 한다.

○ 구매관리 영역은 통상 개별 유통조직에서 전담하여 각각의 생산자에 대해 계약재배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를 생산관리실무자연석회의에서 통합하여 전수조사하고 이를 수요량에 맞게 조정하여 유통조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진행한다.

한 생산자에 대하여 여러 단체가 중복해서 관리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동시에 농산물의 가격 조정의 역할까지 진행하여 원주지역 전체에서 통일된 관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2) 원천연 미포괄 단체 및 개인의 조직화

○ 원주푸드에 공급되는 농산물의 출처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 ① 상업농, 대농이 생산한 농산물 중에서 일부 판매되지 못한 농산물
- ② 새벽시장 등에서 유통되고 남은 농산물
- ③ 환경농업직거래단체에서 매수한 농산물 중 전국단위 물류센터와의 계약재배에 속하지 않은 농산물

④ 환경농업직거래단체의 회원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학교급식 작목반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되어 계약재배된 농산물

⑤ 도매시장, 유통센터 및 농협, 벤더 업체 등을 통해 원주시 외곽에서 재배된 농산물 등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⑤번 농산물이 70% 전후를 차지할 것이고 ③, ④번이 20%~30% 사이일 것이고 나머지 ①, ②번이 3% 미만일 것이다.

○ 따라서 학교급식 사업에서 있어서 특히 지역식량체계를 염두해 둔 학교급식이라면 ⑤번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③, ④번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다.

○ ①번의 경우에는 공동출하조직, 공동브랜드조직과 같은 시장지향성 농업정책을 통해 농협을 통해서 수탁판매 되거나 도매시장을 통해 소비될 것이다.

○ ②번 새벽시장의 경우는 농산물의 양의 문제라기보다는 품질, 인증 등 안정성의 문제가 주로 많이 제기될 것이며, 원주푸드 인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본다.

○ ③번의 경우는 현재 가장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전국단위 물류센터와의 직거래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여력이 되는 상태에서만 원주푸드 공급에 참여할 것이므로 비약적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대치를 산정하고 그 양을 매년 늘려가는 방향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 ④의 경우가 앞으로 조직해야 할 과제인데 환경농업직거래단체 회원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작목반이란 이름으로 조직화 작업을 별도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에서 최대한 회원을 확보하게 하고 그래도 조직이 안 된 회원의 경우는 학교급식 작목반으로 별도로 묶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단체와는 별개로 학교급식 작목반으로 조직하자는 견해로 나뉜다.

○ 원주시의 경우 후자 쪽을 겨냥하여 친환경채소 하우스 지원 사업을 벌여 이들을 작목반으로 조직하고 이들이 직접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직거래라는 장점이 있지만 농산물 공급에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다. 일정한 조직과 결합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가격의 등락에 따라 출하처를 달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이들에 대한 조직화를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 생산과 관련된 문제이니 원천연에서 담당하여 학교급식 작목반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고, 구매력이있는 단체 - 예를 들면 원주푸드협동조합에서 직접 개인 회원으로 받아서 조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원천연 미포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조직화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원천연은 생산자 조직이라는 점이다. 유통조직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유통단계별로 역할을 나누고 조정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직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원주지역의 가능한 모든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는 원천연을 통과해야 성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원천연을 통한 구매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거나 소비될 수 없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물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구매의 경우는 구매력이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통합관리 시스템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의 양을 가늠하고 이에 관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구매는 실제 구매력이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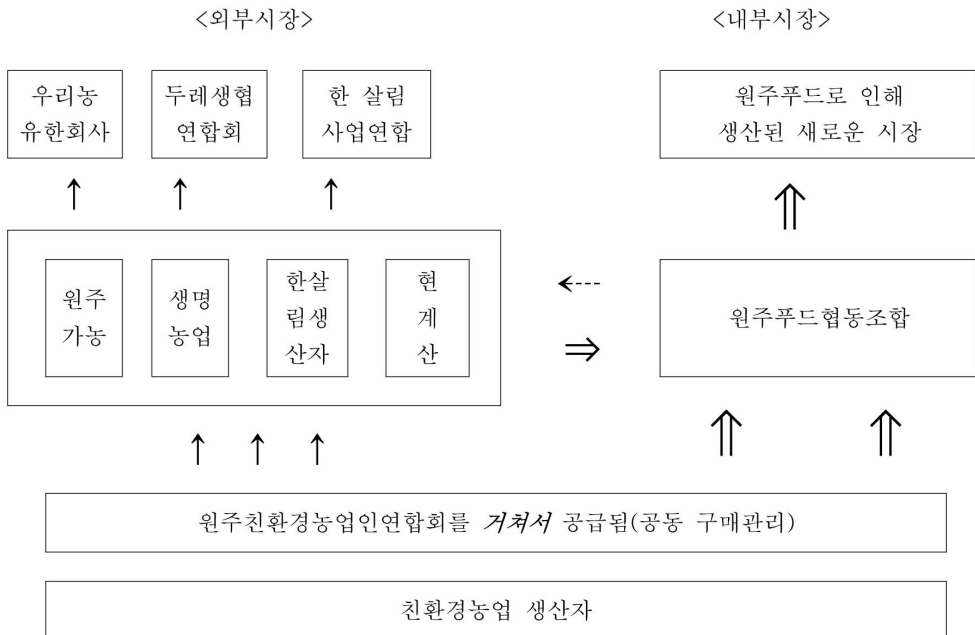
3) 소비시장을 통해서 본 유통체계의 구분

○ 유통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기본 소비자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상태에서 판매시장을 원주푸드 내부와 외부시장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건해이다. 원주푸드 협동조합으로 규모화하기에 기존의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충하기 위한 단계이다.

○ 외부시장은 전국단위 물류센터와 결합된 시장으로 수도권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시장.

내부시장은 학교급식 등 원주푸드 운동으로 만들어 지는 시장을 말한다.



• 실선 화살표 : 외부시장 물동선

• 양선 화살표 : 내부시장 물동선(수수료는 내부 거래에서만 발생, 원천연 귀속)

• 점선 화살표 : 내부거래(전처리를 거친 농산물)

○ 원주푸드협동조합이 높은 수준의 품질관리 능력을 확보(전문성)하고 단체의 홍보력 및 교섭력(대표성), 안정적인 조직운영(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규모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조직이 규모화하게 되면 농가간의 이질성이 높아지고 품질과 물량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규모화와 조직력의 모순관계가 발생한다.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경우 “정시, 정량, 정품질, 정가”의 양상이 펼쳐진다. 학교의 구매담당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량을 원하는 품질로 원하는 가격에 거래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의 규모화는 필수적이지만 무분별한 규모화를 위해 조직력을 포기한다면 농산물 품질이 나빠져 결국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 따라서 각 단체의 상황을 존중하고 각 단체에서 더욱 조직력을 높게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배치한다. 높아진 조직력으로 인해 농산물의 품질이 높아지면 판매창구를 단일화하여 매수집하는 방식을 통해 규모화의 효과를 달성한다.

○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판매창구가 가능, 생협, 원주푸드 등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천연을 통해 구매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원천연에서 친환경 생산자들의 생산량을 조정하여 판매할 곳을 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이런 구도에서의 문제는 환경농업직거래 단체의 사업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데 있다. 단기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결합력이 약화될 것이다.

○ 원주푸드 협동조합에서 학교급식 이외에 다른 영역을 개척하여 시장이 넓어진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환경농업직거래 단체 뿐만 아니라 농협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신규 시장 개척은 반드시 필요하다.

4) 농협의 참가

○ 학교급식에 대한 대응을 놓고 농협의 참가를 논의하는 것이 어쩌면 어색할지도 모르겠다. 이미 원주지역의 단위농협은 나름대로 학교급식에 참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대부분을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원주에서는 농협이 학교급식에 적극적이지 않다.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첫째는 학교급식 시장의 특성상 수익구조를 많이 창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주지역 농협이 공동브랜드, 공동출하 등 단위농협 간 연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적다는 것이다.

○ 그렇지만 농협이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도 있는데 조합원의 요구를 어느 정도 실현시켜주기 위해 (조합장 선거 등의 이유) 경제사업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최근 대형마트의 진출로 하나로 마트 매출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일정한 자구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런 이유로 농협의 참가는 아무래도 수익성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는 특성상 학교급식만을 가지고 농협과 교섭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 농협의 참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의사결정권에서 1인 1표제 등 협동조합원칙이 지켜지는 선에서 농협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농협과 장기적인 비전이 공유되어야 한다. 농협은 장기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창출처가 필요하며 원주푸드협동조합의 경우는 자금조달이 원활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각자의 요구가 실현되는 차원에서 비전공유를 통해 전망을 예측하는 작업이 농협과 이루어져야 한다.

3. 소비영역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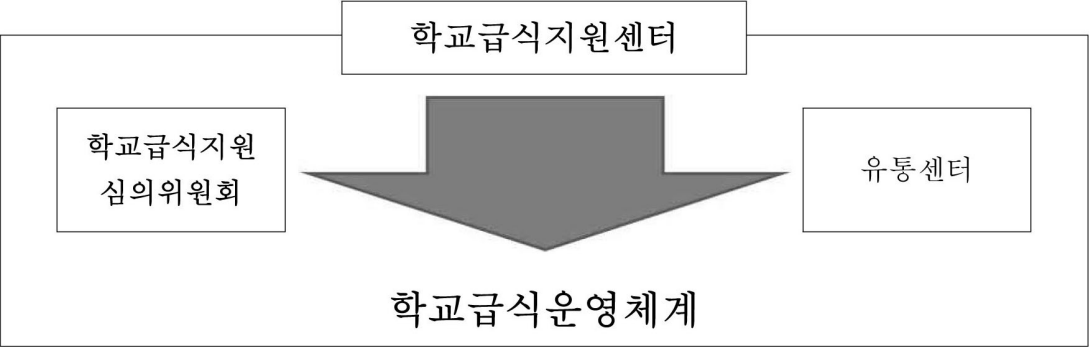
○ 소비영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영역, 생협 등에서 소화하는 지역 직거래 영역, 행복한 달팽이 등 지역 소상공인, 요식업체와 결합한 농상공연계 영역,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장터 등 일반시장 영역 등이다.

○ 이 부문과 관련하여 원주로컬푸드 TFT 내부에서 크게 논의가 진척된 바가 없어서 개념적인 설명과 사례 소개로 그치겠다.

1)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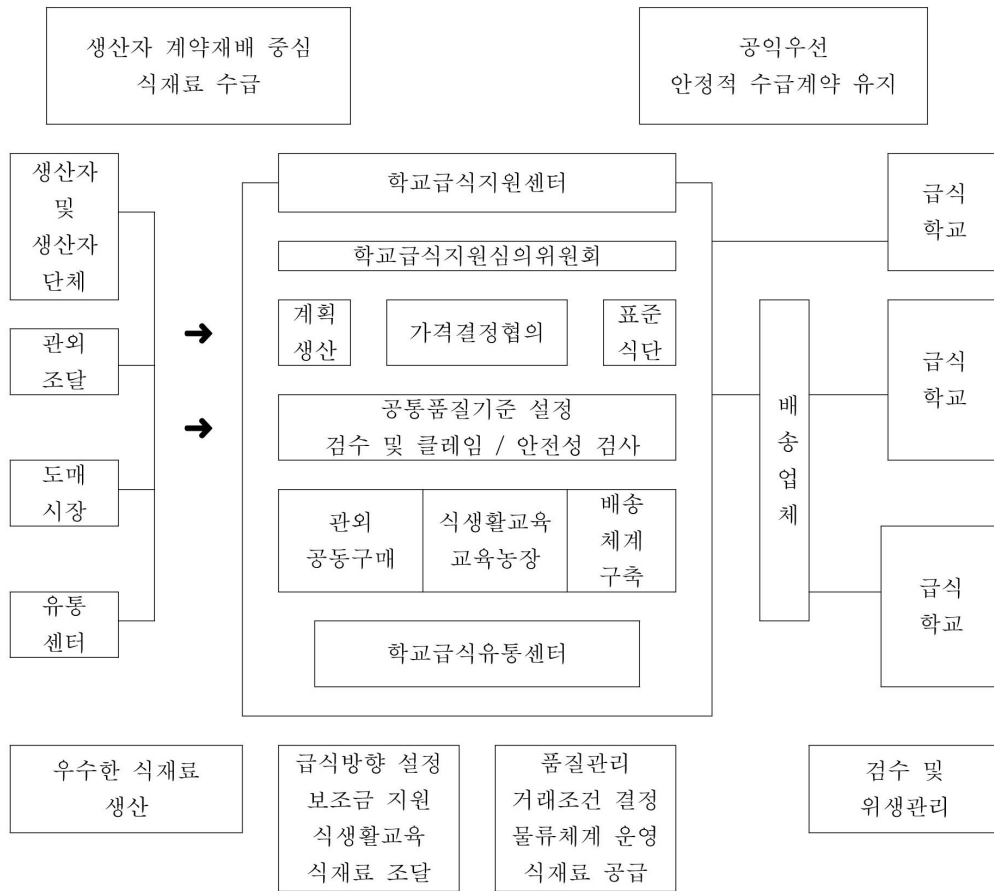
○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이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및 공급과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고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遂行)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이 운영체계는 시민사회 등이 포함된 협의체와 유통센터로 구성되며 통상 협의체를 원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명시하고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체계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 유통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총괄조정형
 -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배송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배송통합형
 -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배송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배송분리형 등으로 구분된다.

○ 한편 학교급식에 관한 공급 시스템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학교급식 지원센터는 시장이 필요하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띤 비영리 법인 형태의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원주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 11조 3항)

○ 이 규정에 의하면 지원센터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설립이나 민간위탁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역시 수의 계약 혹은 공모에 의한 방식을 예상할 수 있다. 어느 경우가 되던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최근 지원센터와 유통센터의 기능을 구분하여 농민과의 계약재배나 배송업체의 선정과 같은 문제는 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유통센터는 순수하게 유통기능만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보이고 있다. 배송업체의 계약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얹힌 복잡한 문제를 민간 스스로 정리하기가 어려워 집에 따라 관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8) 광역 학교급식 시스템 구축 및 모델 정립, 최영찬, 2010, 제2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대토론회 자료집

○ 따라서 원주의 경우도 지원센터는 원주시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원주시 문화재단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유통센터는 원주푸드협동조합에서 위탁받는 형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원센터에서는 사업체 선정 및 공급업체 관리관독 업무를 진행하고 공급주체인 원주푸드협동조합에서는 원주푸드 농산물 구매, 학교계약 및 수발주, 소분 포장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 한편 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형식은 가능하면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것이 위 조례에 규정에 근접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원주푸드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원주푸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조례에 근접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당일배송이 제기되지만, 실제로 학교에 저온창고가 2~3평정도 마련되어 있다면 당일배송이 아닌 전일과 당일배송을 혼합하는 체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송 문제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급식으로는 현재 맞두레가 진행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및 예비군 급식을 포함하여 병원, 복지시설, 공기업, 공공기관, 군대 등 그 영역을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과 병원, 복지시설, 민간부문의 급식 식재료비는 1일 1kg 최소 2,000원을 기준으로 연간 250일을 계산하면 연간 약 166억원 규모로 학교급식규모를 상회하는 상당한 규모로 추정할 수 있음.⁹⁾

○ 이런 다양성과 사업성이 공공급식 사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며 농협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 직거래 영역

○ 지역 직거래 영역은 현재 원주한살림에서 사업연합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취급하는 지역물품과 원주생협에서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는 지역물품 등과 같이 지역물품이 매장을 통해서 소비되는 방식의 영역이고 다음으로 원주한살림이나 원주생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역산 재료를 이용하여 꾸러미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신규사업 영역이 있다.

○ 현재 지역 직거래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류가 다수이고 1차 농산물의 경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1차 농산물의 공급이 어렵고 장기보관이 잘 되지 않는 특징도 있지만 이 부분에 주목해 왔던 것이 지역 살림농산, 햇살나눔 등 지역 가공업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직거래 영역을 개척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생산관리 실무자 연석회의가 안정화되고 1차 농산물의 수요가 파악되면 1차 농산물을 대상으로 지역 매장에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더 구체화 될 것이며, 원주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이 구성되면 신선식품의 경우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원주푸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앞의 자료, p69

3) 농상공연계 영역

○ 농상공연계의 영역은 농림어업자와 중소기업자의 연계와 협력을 말한다. 최근 농림수산물부나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6차산업, 지역클러스트, 지역혁신체계 등이 비슷한 개념으로 농상공연계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우리나라 농상공연계의 사례를 보면 고창 복분자, 문경 오미자, 화천 토마토 등 주산지의 1차 농산물을 매개로 하여 중견기업 이상 수준이 되는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형성된 경우가 많고 지역 차원의 결합, 지산지소의 경우는 많지가 않다.

○ 현재 소규모 식당의 경우 새벽시장을 이용한 식재료 수급은 이미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내 가공업체들이 지역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행정의 지원책이 부족한 것 같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지역자원활용촉진 지원조례' 등의 제정으로 행정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파주의 장단콩과 파주시내 장단콩 전문음식점 연계 사례, 담양 딸기 영농조합법인과 담양군내 베이커리 프렌차이즈를 만든 사례, 평창 메밀 농가와 메밀가공업체 및 음식점과 연계한 사례 등 지산지소형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지역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 신선식품 공급체계에 대한 고민도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의 소비자들에게 신선식품(도시락, 간편식 등)공급과 지역 로컬푸드 식당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차 농산물 생산자의 몇 그룹을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시키고 이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전량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농산물 생산체계와 신선식품 수익구조상의 한계지점을 파악하여 최적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지역 내 농상공 연계를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적 경제기반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원주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하여 지역 농상공연계 관한 큰 그림이 필요하며 원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과의 협력관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4) 일반시장 영역

○ 농민장터 등과 같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영역이다. 현재 새벽시장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새벽시장의 역할과 내용의 질을 높이는 수준으로 고민이 진행되어야 한다.

○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농민장터를 꾸리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장터를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농민장터를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친환경농산물의 양이 적어서 계약재배 물량을 채우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량이 많기는 하지만 시장이라는 구색을 맞추기에는 부족하다.

○ 따라서 독자적인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농민장터 보다는 새벽시장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에 대한 원주푸드 인증, 서비스의 개선, 새벽시장 내 친환경농산물코너 등의 방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훨씬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4. 원주푸드협동조합을 위한 과제

○ 지자체, 교육청, 농협, 학교, 환경농업단체 등을 넘나들며 원주푸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만들 실무협의 팀의 구성이 절실하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실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가와 작부체계를 협의하고 계약재배를 진행할 수 있다.

○ 참여단체의 역할분담 학교급식 작목반 구성을 통한 계약재배를 지향하여 원물 확보 체계를 구축한다.

○ 참여단체의 경우 학교급식체계로 보면 출하회로 결합되는 경우인데 수수료를 품목별로 다양화하여 참여를 통한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친환경채소 시설하우스 지원농가 및 둔둔리 지역 하우스 재배농가 등 지역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를 연계한 학교급식 작목반을 구성하고 이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한 품목과 출하시기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교급식 작목반의 경우 원천연 산하 조직으로 꾸리고 장기적으로는 원주푸드협동조합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와 계약재배 위약농가에 대한 패널티를 고려하여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판매경로를 다양화하여야 한다.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군대급식 등 판매경로를 다양화하여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법인의 지배구조는 1인 1표가 원칙이다. 다만 사업발전과 이해관계가 적은 단체 혹은 개인에게 상대적으로 큰 의사결정이 주어지게 되므로 무임승차를 유발하여 회원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형 모델로 하여 출자 지분 만큼의 의결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자본조달에 있어서 참여단체 등의 출자를 통한 기초자본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재 맞두레 수준 이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회전출자제도와 같은 방식도 검토해 볼 만 하다.

○ 회전출자제도는 출자배당 보다는 사업 이용에 따라 이익을 환원하는 제도이다. 판매사업을 수행한 이후 얻은 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하고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이익을 내부 유보하고 나머지를 사업 참여단체 혹은 회원에게 배당한다. 이 내부유보분이 회전출자분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농가 혹은 참여단체에 환원하는 제도이다.

○ 법인의 형식은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민간위탁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이 필요하며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원주푸드 목적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여겨진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의 3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 93조 1항)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참여단체와 농가들로 하여금 공동운명체의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기본이다.

특히 각 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집중화하여 원주푸드 진행 상황을 보고 점검하며 이를 통해 임원 간 결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학교급식 작목반원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하다.

○ TFT의 논의결과를 가지고 친환경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 설명회,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관련 대상자를 조직화 하는 사업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IV. 맺으며

원주로컬푸드 TFT에서 논의한 내용보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서술되어 논의를 통해 수정되어야할 부분이 많다. 토론을 통해 풍부한 내용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한편 농협, 지자체, 교육청, 학교, 환경농업단체 등을 넘나들며 원주푸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고 시행에 필요한 과제를 정리할 단위가 필요한데 현재 TFT에서는 구성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이런 부분을 모두 담아내기가 어려워 보인다.

TFT의 논의 내용을 가지고 위와 같은 단체에서 참가하는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원주푸드 내용협의 및 조직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